

독일 통일 과정과 동독 사회의 변화

윤도현 / 한양대 강사, 사회학 박사

독일의 급속한 통일 과정은 동독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에 의해 주도되었다기 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즉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의 변화 속에서 서독의 집권 정치 세력, 언론 등이 실질적으로 통일 과정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급속한 통일 과정은 이후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동독 주민들의 생활 양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가급적 피하려면 우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반성, 특히 통일 주도 세력과 시민 사회 내부의 역량에 관한 반성이 필요하고, 둘째,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인 노동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I. 머리말: 동독의 몰락 원인과 과정

동독 및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은 비록 정확히 그것이 언제 일어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되지 못하긴 했지만 결코 완전히 '우연적인' 사건만은 아니었다.¹⁾ 왜냐하면 동독 및 동구사회주의 사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체제 결합적 문제들을 안고 있었으며 따라서 획기적인

개혁이 없는 한 별로 미래가 없는 사회이었음이 결국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물론 서구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유와는 달랐지만 서구의 대다수 좌파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된 사실들이었다. 따라서 비록 결론론적이긴 하지만 동독 및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을 단순히 아주 '우연적인' 사실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거기에는 우연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무언가 사회 구조적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동독 붕괴의 근본적

1) Reissig, R., Das Scheitern der DDR und des realsozialistischen Systems. - Einige Ursachen und Folgen. in: Joas, H./Kohli, M.(Hrsg.), Der Zusammenbruch der DDR. Frankfurt/M 1993, p.59 참조.

원인은 역시 동구의 현실사회주의 일반이 가졌던 계획경제 시스템의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동구사회주의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메카니즘이 완전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시'는 그 대가가 너무나 컸다. 모든 경제 활동이 국가의 중앙 집중적인 계획과 지도에 의해 할당되고 또 매개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부의 정상적인 유통과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의 욕구는 위로부터 거의 '독재적인 방식으로' 부과되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포괄하려는 계획은 생산과 욕구가 하루하루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발전하는 현대의 경제 시스템과 점점 양립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동구사회주의 붕괴의 주원인은 관료들의 잘못된 계획 또는 권력의 자립화에 있다기 보다는 '계획경제' 자체의 모순에 있다. 계획경제에서의 결핍은 정보 테크놀로지의 개선이나 부패한 관료에 대한 처벌로도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²⁾

한편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국가계획경제는 사회의 다른 부문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전반적인 계획은 통일되고 중앙집중적으로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생산과 분배에 관련된 많은 사회적 집단들은 위계적인 조직구조하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

급 수준이나 공장 또는 사무실의 기본 질서에 대한 하등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수동적 성원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었고 개인의 창조적 역량과 사회의 주인 의식의 발전은 억제되었다. 즉 현실사회주의에서 개인의 발전은 장려되지 않고 오히려 집단을 위해 포기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동구사회주의에서 관찰되었던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전면적인 발전이 장려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회성원의 하향적 평등화와 무차별적인 균등화이었다. 동독의 사회는 이러한 계획경제 체제의 모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 모순이 바로 동독 붕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주요 부분의 발전을 가로 막고, 체제를 허약하게 했던 근본적 원인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³⁾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독의 붕괴 과정은 좀더 구체적으로 볼 때 주변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동독의 경우 "혁명"(Revolution)이라는 말 보다는 오히려 "붕괴"(Zusammenbruch)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1989년 가을 비록 동독의 민중들이 저항하며 일어나긴 했지만 보다 결정적이

2) Krüger, S., Marktsozialismus- eine moderne Sozialismus-Konzeption für entwickelte Länder, in:Heine, M. u.a.(Hrsg.), Die Zukunft der DDR-Wirtschaft, Hamburg 1990, p.61 참조.

3) 한편 하나의 근본 원인의 규명에 반대하며 동독 붕괴의 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설명방식을 소개하는 논의는 Joas/Kohli, 앞의 책, p.20f을 참조할 것.

있던 것은 국제 정치적 조건들과 동독 정부의 무능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그렇게도 쉽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혁명'의 개념으로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다.⁴⁾ 또 주지하다시피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와는 달리 과거 동독에는 이렇다 할 민중의 지속적인 투쟁과 패배의 경험, 그리고 저항의 전통이 없었으며 대중에게 잘 알려진 민주적 인사(예를 들어 동구의 두브체크, 하벨, 바웬사)는 물론 기존의 정권에 강력히 대항하는 조직도 없었다.⁵⁾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독일의 통일 과정의 원천적 동력은 결코 동독 민중의 민주주의적 동기와 자발적 운동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구 동독 정부의 정치적 억압기구의 통제 능력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그동안 매우 미약했던 대정부 저항 세력이 동독의 국가, 사회 체제를 흔들게 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민중이 국가 억압기구에 대해 투쟁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국가 억압기구의 급속한 약화가 대중운동의 세력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저항,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들의 집단적 열망보다는 경제적으로 보다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동독을 붕

괴시키는 데 더욱 결정적이었다.⁶⁾

그런데 독일의 급속한 통일 과정과 관련하여 과연 이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돌이켜 보건대 1989년 말, 1990년초 당시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물론 실로 많은 연구기관들, 이익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 방안에 관하여 단계적 계획에 입각한 점진적 통일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990년 2월 7일의 내각회의에서 서독의 연방정부는 모든 경제적 논리에 반하여 행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급격한 통화통합 보다는 적절한 동독 지원 기금 및 특별 회계를 통하여 동독 지역의 화폐 정책의 실시, 예상되는 실업 문제 등의 위험에 대처하고 그럼으로써 동독내에서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시장과 경쟁 관계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었다. 1990년 독일의 통일 과정은 오히려 1990년 가을 당시 독일 중앙은행의 이사회 회원이었던 뉘링의 말처럼 "상당 부분 이데올로기, 객관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무기력화의 경향"⁷⁾ 으로 점철되었던 측면이 있다.

4) Joas, H./Kohli, M., Der Zusammenbruch der DDR: Fragen und Thesen. in: Joas/Kohli (Hrsg.), Der Zusammenbruch der DDR. Frankfurt/M 1993, p.9.

5) Offe, C., Wohlstand, Nation, Republik. Aspekte des deutschen Sonderweges vom Sozialismus zum Kapitalismus. in: Joas/Kohli(Hrsg.) 앞의 책, p.284.

6) 위의 논문, p.291 이하 참조.

7) Nolling, W., Geld und die deutsche Vereinigung. in: Hamburger Beiträge zur Wirtschafts- und Währungspolitik, Nr.8, Hamburg 1991, p.41.

하지만 급속한 통일 과정으로 인한 구동독 지역의 사회, 경제적 변화는 실로 지대하였다. 우선 1990년 7월 1일 실시된 통화 통합은 동독의 경제에 여러 치명적 결과들을 양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독은 다른 동구 국가들에 비해 시장경제의 급속한 도입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체적이고 자성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독의 무기력'을 의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의 무조건적인 의무'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량의 경제적, 사회적 원조가 불가피하였다.⁸⁾

물론 서독이 가지는 막강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동독의 경우 다른 여타의 동구의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고 근대화하는 데 보다 유리한 물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독인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된 (서로간의 협력이 아니라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의 일방적인 적응의 강요를 의미하는) 서독 일변도의 통일 드라이브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말았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급속한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기업들은 몰락하고 생산성은 하락하였으며 산업은 공동화되었다. 당연히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났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생활의 불안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 못지 않게 동시에 심각하게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바로 급속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동독인들의 가치관의 혼란 및 새로운 사회 질서로의 적응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신적 갈등과 혼란이었다. 그러면 이제 통일 이후 동독의 사회 구조와 일상 생활의 주요한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II. 통일 이후 동독 사회의 변화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사회적 변화 중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동독 자체 경제의 파산이다. 수많은 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는 많은 추가적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높은 실업율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 활동에 의한 생계의 기반을 상실하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타격이 컸던 사람들은 일부 특정 직업의 종사자들, 단순 노동자, 고령 노동자, 여성 취업자이었다. 여성들은 1992년 9월 당시 전체 실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실업자의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주요 원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노동력이 집중되었던 산업 분야 즉 섬유, 식료품 산업, 농림업 등의 부문이 특히 대대적인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고용 창출 조치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셋째, 사회보장 체계의

8) Sakowsky, D., Probleme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 Überblick. in: Deutschland Archiv 12/1992. p. 1255.

변화로 여성 취업에 필요한 탁아소, 유치원 등의 사회간접시설이 매우 줄어들었다.⁹⁾

주지하다시피 동독은 서독에 비해서 매우 높은 취업율을 가진 사회이었다. 따라서 서독에서 중요한 변주인 '실업자', '전업주부' 등은 동독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적지 않은 동독의 주민들은 생활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 동독 시절 주민들은 비록 서독의 주민보다 못살긴 했지만 생활의 불안정에 시달리지는 않았었다.

또 통일은 동서독간의 노동력의 이동을 야기하였다. 특히 젊고 유능한 노동력들이 서독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된 동독 지역의 경제는 더욱 타격을 입었다. 한편 서독 지역은 새로운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또 노동 시장에서 일부 양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독의 상품들이 동독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원인으로 우선 과거 동독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즉 국가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중앙 관리기구의 비효율성은 낮은 투자로 인한 설비의 노후화, 고도의 환경 파괴, 사회간접시설의 미발달을 초래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사회복지 수준과 은폐된 수많은

실업자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¹⁰⁾

하지만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만으로 동독 지역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 경제의 어려움은 적지 않은 부분이 통일 과정에서 정책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급속한 화폐 통합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나아가 이에 필요한 소유 관계 및 법률 행정 체계의 미정리 등은 바로 그 대표적 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연방정부는 뒤늦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동독 지역에 쏟아 붓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실업자 구제, 복지 관련, 사회간접시설 등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의 악화를 막기만 할 뿐 문제의 근원적 처방과는 거리가 있다.¹²⁾ 다행히 최근 동독 지역의 경제가 서서

10) Sakowsky, 앞의 논문, p.1254.

11) 통일위, 「독일 통일 3년: 현황과 전망」, 1994, p.80 이하 참조.

12) 동독 지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서독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과 노령자 불 위한 조기퇴직제도, 실업보험제도, 고용촉진제도, 직업교육훈련제도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촉진책과 노동시장 정책이 동독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동독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실업 문제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전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에 대한 막대한 소요 자금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을 압박하여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되고 이것은 다시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통일 독일의 분야별 실태", 통일위, 「독일 통합과 체제 전환」, 1992, p.138 참조.

9) Winkler, G.u.a., Sozialreport 1992 - Daten und Fakten zur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p.78 이하 참조.

히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점점 올라간다는 보도가 있지만 통일의 후유증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독의 주민들에게는 그 속도가 문제이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경제적 변화는 동독 주민들의 생활 양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동독의 주민들은 과거의 정태적인 생활 양식에서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생활 양식으로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는 한편으로 마치 '고여있는 물' 같았던 구동독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정하고 경쟁적인 사회 관계 속에 편입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쟁적 사회 관계의 확산 속에서 기존의 직장내의 인간 관계는 '동료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바뀌었고 또 친구, 친척, 이웃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급진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통일은 또 동독 지역의 가족 형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동독은 서독에 비해서 조혼율과 이혼율이 높았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일인 또는 이인으로 구성된 가구도 서독에 비해 매우 적었다. 또 동독에서 이혼한 사람들 중의 다수는 교제 파트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 동독에서의 여성 취업, 기타 사회정책적 조건들이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 이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동독 지

역의 가족 형태는 점차로 서독의 모델에 수렴해 갈 것으로 보인다.¹³⁾

통일 이후 동독인들은 의식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 아노미 현상, 무기력, 두려움, 패배감, 고독감 등이 서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네오나치 등 극우주의적 이념이 일부 동독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전반적인 변화와 매우 관련이 깊다. 그러나 여러 조사들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당수의 동독인들은 과거 동독 치하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삶의 기회들,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 여행의 자유 등등을 가지게 된 데 대해서는 아주 만족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적 권리들 역시 그들의 일상 생활에 결정적인 고용, 사회 복지 등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면 부차적 의미만을 지닐 수도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 노동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회보장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독의 사회보장 제도는 서독과는 달리 실업보험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 중앙 집중적으

13) Zapf, W., Die DDR 1989/1990 - Zusammenbruch einer Sozialstruktur? in: Joas/Kohli (Hrsg.), 앞의 책, p.42.

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체제를 갖추고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다. 동독의 사회보장 수준은 여성, 가족 분야를 제외하면 대체로 서독보다 뒤쳐져 있었다. 따라서 서독의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부문에서는 사회보장 수준이 올라가고 다른 부문에서는 내려가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동독 지역에서의 경제적 침체는 사회 보험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동독 지역의 실업자 문제는 사회보험료의 재정 확보를 계속 어렵게 하는 반면 사회보장에의 필요성은 계속 존재하게 만든다.¹⁴⁾ 이것은 사회 보험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서독의 사회보장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불가피한 것이다. 또 동독 지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동독 지역의 사회보장 혜택수준은 여전히 서독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I. 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동독 지역의 사회적 변화를 살펴 보면서 독일의 통일이 그곳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러면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은 한반도의 통일 논의에 어떤 함의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우선 제기되어야 할 것은 독일에서의 급속한 통일 방식에 대한 평가이다. 급속한 통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설사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통일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그 동안 민족 분단으로 인한 제반 고통과 그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 것을 주요한 성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통일의 의미가 한반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독일의 통일은 과연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복지적 희생과 오류를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할 때 우리는 북한 지역에 남한 제도의 단기간의 이식과 정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일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기틀을 만들어내는 통일 환경(정책)의 개발에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독일의 급작스런 통일이 그들의 통일 정책의 오류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처럼 설령 한반도의 통일이 급격하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흡수, 합병을 추구하는 통일 정책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 효율성만

14)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논문, 1992, p.139 이하 참조.

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의미이며 북표라고 할 때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통일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내부의 민주화와 개혁을 독자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남한은 좀 더 자기 성찰적인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야만 보다 바람직한 통일 한국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¹⁵⁾

둘째, 독일의 급속한 통일 과정에서 과연 주체는 누구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서독과 동독의 민중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독의 정치가들과 지배세력 그리고 막강한 언론 매체들이 통일 이후 사회 구조 변화의 방향과 깊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일반 대중들의 여론은 완전히 실종되지는 않았다 해도 그 어떤 가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실제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여 과정을 주도하기 보다는 정치적 조작의 대상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왜냐하면 남한은 서독에 비해 그리고 북한은 과거의 동독에 비해 시민 사회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라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의 현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남한정부도 사회 각계 각종으로부터의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저지하면서 매우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일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의 통일 과정이 경우에 따라 남북한 소수의 지배 집단의 의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고 또 시민 사회내의 모든 사회 운동 세력들이 활발한 통일 대안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셋째, 독일의 통일에서 서독은 일방적인 '희생자'로만 그리고 동독은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단편적 사고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에서 수혜자들은 우선 동독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으로 이주한 고급 전문 인력, 구동독 지역 내 민간 경제와 국가 행정기구를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 동원된 중간 계급, 지식인 등과 발빠르게 변신한 과거 동독의 당, 국가 기구의 지도급 인사들, 학자들 등을 들 수 있다. 동독에서 피해자는 단순 노동자, 농업 노동자, 연금 수령자, 하급 사무직 노동자 및 여성들이다. 서독의 경우 수혜자는 일차적으로 넓은 소비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얻게 된 서독의 자본들, 그리고 실직 상태에 있다가 통일 이후 동독 지역


15) 전성우,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통일로의 길: 두 가지 전망", 1994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 발표 논문, p.105 참조.

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 서독 출신의 지식인, 전문가 등이다. 이에 반해 서독 노동자들의 다수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가뜰이나 높은 실업률에 동독의 저임 노동력의 등장은 자본과의 임금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이 되며 또 동독에 대한 서독의 이전 지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조세와 복지 비용의 삭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서독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층이다.¹⁶⁾

이렇게 독일의 통일 방식이 동서독 각 계층의 삶에 있어서 매우 상이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면 한반도의 경우 현재의 상태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보다 더한 사회적 이동과 계층적 피리가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처럼 어느 정도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규범마저 가지고 있지 않은 남한은 더욱 더 적나라한 형태로 북한 사회를 재편할 것이 확실하고 또 북한으로부터 남한 지역으로의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은 남한의 대다수의 취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더구나 남한에는 아직도 일부에서 전근대적인 노사 관계가 존재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제도적 발전이 매우 빈약하다고 볼 때 이러한 상황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의 폭과 깊이는 독일보다 몇 배나 더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민주적인 노동법의 제정 및 준수,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이 시급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독일 통일과 동구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선진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일방적 승리가 여기 저기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페(Offe)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즉 노동과 고용의 문제, 성, 인종 차별 및 세대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은 동구의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했다고 해서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반대로 동구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주의 국가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질적으로 심화되고 또 양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 자본주의-사회주의 양 체제간의 냉전적 대립은 사라졌지만 자본주의 내부에서의 모순과 갈등은 기존의 경제 전략과 복지국가적 제도들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¹⁷⁾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모델을 단순히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성과물'과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한반도의 통일과 통일 이후의 사회 건설에 보다 우리 나름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모델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16) 훈거 하이데, "민족적 통일과 사회적 분열 - 독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장차과 비평」, 제 21권 1호, 1993년 봄, p.351 이하 참조.

17) Offe, C., 앞의 논문, p.300 참조.